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 산업 정책 과제



천길주 현대건설(주) 전무이사
대한상시중재원 중재인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많은 건설업체들은 신규 수주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으며, 신규 수주 공사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적자 시공으로 심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매우 우려할 상황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도 호전될만한 호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현재 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건설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는 “건설 산업은 기술 산업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건설 산업의 발전은 기술경쟁력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건설 산업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건설 산업 정책의 큰 흐름은 기술이 아닌 가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격과 품질은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 목표이자 추구해야할 가치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나친 가격 위주의 산업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기술 경쟁력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산업계의 실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가격을 보장하고 오히려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싼게 비지 떡”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비지떡이 맛있다 하더라도 좋은 재료로 정성들여 제대로 빚어낸 찹쌀 떡 맛과 어찌 비교 할 수 있겠는가?

가격 경쟁에 치우친 입,낙찰 제도는 당장은 국가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춰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조달하는 시설물들은 총생애주기 개념의 원가 개념과 품질 확보가 더더욱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행 가격 경쟁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는 민간 기업의 중,장기 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즉, 기술 개발을 통한 건설 산업의 글로벌화 및 이러한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 역시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소중한 정책 과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건설 금융 산업의 개혁과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 금융 산업의 후진성은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금융은 산업계의 핏줄로서 건설업계에 건전하고 신선한 유동성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금융기관이 건설 금융의 제공에 따른 모든 리스크들을 업계에 전가하고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낙후된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금융기관은 건설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고, 자금 제공에 따른 권한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의

미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건설산업과 금융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 성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 건설 시장에서 악성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현재 건설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부실 상황에서 우리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차선책은 지금이라도 금융기관이 건설업계와 한배를 타고 있는 동반자로서 손실과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손실을 분담하여 털어버리고 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건설 금융 선진화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과제는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투자 개발형 시장 및 민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이 단행되었지만 시장에서 국민들의 심리적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얼어 있는 거래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과감한 면세, 감세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각종 연금, 민간자본 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건설 부동산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고에서 잠자는 풍부한 유동성 활용과 건설 경기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과제들과 아울러 차기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정책을 더욱더 과감하게 지원, 육성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 더하여 중남미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신규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외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 줄 것이다.

이들 신규 시장 국가들은 에너지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으로, 최근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이들 자원 개발형 연계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원 확

보, 수주물량 확보, 통상 외교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차기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대비하여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분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에 북한 시장은 분명 새로이 진출할 신세계임에 틀림없다. 정치적, 군사적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은 개방, 개혁의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주도적으로 북한 시장을 개척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건설 산업 주변의 통신산업, IT산업, 각종 신소재산업 등 관련 산업들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건설 산업은 이제 이러한 관련 산업들과의 기술적인 융합을 통하여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건설업계의 기술능력 발전과 향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보다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건설 산업이 기술 경쟁력이 있는 최첨단 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